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90
----------	-------

발의연월일 : 2025. 4. 28.

발 의 자 : 임종득 · 김기웅 · 김형동
서일준 · 김예지 · 박수민
강선영 · 강대식 · 서천호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u>

<u>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u>
